

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3년 9월 27일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## 2. 제안이유

- 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단계적 일원화를 위한 이원화 규정을 마련하고,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군위군 지역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(안 제6조)

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현행 군위군의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단서로 신설, 대구시의 현행 조례와 이원화하고 2026년 1월부터 대구시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.
- 안 제5조제1항제3조에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하고 급수구역 내에만 부과하던 원인자부담금의 범위를 급수구역 내외 건축물로 개정하는 것으로,  
  
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·중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의 범위는 급수구역 내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3호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만을 급수구역 내로 별도로 특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과 대상과 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.
- 안 제6조제1항과 안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군위군 지역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및 단위사업비에 관하여 현행 조례에서 대구시와 군위군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이원화하여 별도로 고시하고 수돗물 비용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 사용료 요율표를 준용한 후, 유예기간을 거쳐 대구시의 기준과 일원화 하기 위함으로,

-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대구시와 군위군 모두 환경부의 「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」를 준용하고 있어, 대구시의 기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구 분		원인자부담금 산정식	비고
대규모 개발사업	대구	{단위사업비(총자산/시설용량)×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사용량} +추가사업비	
	군위	단위사업비(총사업비/시설용량)×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사용량	
중규모 개발사업	대구	{단위사업비(순자산/시설용량)×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사용량} +추가사업비	
	군위	{단위사업비(순자산/시설용량)×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사용량} +추가사업비	

- 대·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단위 사업비는 재무제표의 자산, 부채, 자본에 근거하여 수도시설 총 자산(순자산)을 정수장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므로, 대구시와 군위군의 '24년 상수도사업 통합 후 '25년에 시행할 결산을 거쳐, '26년에 일원화된 단위사업비를 산출하여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 대·중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현황 >

(단위 : 원)

구 분		조례 제5조제1항 1~2호에 따른 개발사업		비 고
		대규모	중규모	
대구시	생활수용수	833,000	659,000	2023.01.01.고시 (매년 고시)
	공업수용수	130,000	102,000	
군위군		994,266	984,009	2016.10.25.고시

-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구경별 정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대구시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며, 건축물에 상수도 인입 공사 시 급수공사비까지 합산하였을 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.

< 소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(정액제) 현황 >

(단위 : 원)

구 경	대구시	군위군	비 고
13mm	270,000	64,449	
20mm	720,000	180,554	
25mm	1,296,000	290,013	
32mm	2,572,000	-	
40mm	3,960,000	869,875	
50mm	6,318,000	1,333,988	
75mm	13,086,000	3,237,742	
100mm	22,365,000	5,512,912	
150mm	48,708,000	-	
200mm	69,174,000	-	

- 「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(조례·규칙에 관한 경과조치)에 따라 24년 1월부터 대구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나,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의 애로사항과 더불어 상이한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